

비전 2030의 평가와 과제

An Evaluation of Vision 2030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

- 비전 2030은 복지를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기조를 천명
- 비전 2030이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시장주도의 균형성장모형의 전략과 메카니즘의 개발
 -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투자의 계량분석 모형 개발
 - FTA 등 개방정책이 복지(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복지의 선제적 투자로서의 논리적 검증
 - 한국사회와 가족, 국민정서에 기반한 복지이념과 복지모형 개발
 - 고령사회, 지식혁명시대, 지구촌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인 복지이념의 정립
 - 2030년 초고령사회를 전제로 한 적정 재정규모 재산정
 - 제도 혁신의 구체적 설계, 혁신의 재정절감 효과 보강

1. 비전 2030의 의미

비전 2030은 미래 한국 복지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복지비전과는 차별화된다. 특히 그동안 복지를 투자로 인식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던 경제부처와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내놓은 복지비전 보고서

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비전 2030은 복지를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투자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복지관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더구나 복지를 성장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기조는 사실상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천명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성장 위주의 시장경

제 중심의 국가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편 그동안의 비전 작업은 재정과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재원의 뒷받침없는 공허한 이상을 제시하는 데에 그친 적이 많았다. 이번의 비전 작업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소요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괄목할 만 하다. 정부는 5년 단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왔는데, 이번 비전 보고서는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의 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나아갈 좌표 역할을 한다.

2. 비전 2030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복지 이념

비전 2030은 복지철학이나 이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복지모형을 지향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030년까지 OECD 국가들의 중간정도의 복지재정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적인 복지 노선을 지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과 복지의 균형'을 통한 발전전략을 지향하는 점에서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적투자를 강조하고, 평등의 의미를 결과의 평등 보다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두고 있고, 개방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Giddens의 제3의 길 노선과 유사

하다. 최근에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투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Giddens의 제3의 길과 같은 중도노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Giddens가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표 3>과 같으며, 사회투자국가는 그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민주적 가족(democratic family)이며, 그 특징으로써 ①정서적, 성적 평등, ②구성원간의 상호 권리와 책임, ③부모의 공동양육(co-parenting), ④평생양육계약, ⑤자녀에 대한 타협적 권위, ⑥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무, ⑦사회적으로 통합된 가족(socially integrated family)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가족정책의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 충분히 논쟁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근래에 저출산시대의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

향후 한국의 복지비전은 한국사회의 특수성, 한국 가족의 전통과 특성, 국민적인 정서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한국에 적합한 복지이념과 복지모형을 사회적으로 합의해나가는 데에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이념은 통상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정치적 성향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진화해왔다. 사회가 불변의 복지이념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대한의 공약수를 도출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투자적인 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복지재정의 확대를 설득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다. 그럼

표 1. Giddens의 '제3의 길'이 제시하는 주요 프로그램

- | | |
|--|------------------------------------|
| • 급진적 중도(radical centre) | • 민주적 가족(democratic family) |
| • 새로운 민주국가(적이 없는 국가) (new democratic state: the state without enemies) | • 통합으로서의 평등(equality as inclusion) |
| • 활발한 시민사회(active civil society) | •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
| • 혼합경제(new mixed economy) | • 세계적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 |
| •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 | |
| • 세계주의적 민족(cosmopolitan nation) | |

자료: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1998

표 2. 비전 2030의 복지이념과 과제

비전 2030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철학이나 이념적 기반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 • 성향: 중도노선('시장과 복지의 균형') • 인적투자(사회투자)와 균등한 기회 제공, 개방화를 강조하는 Giddens의 제3의 길 노선과 유사 → 즉 '사회투자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와 가족, 정서에 기반한 복지이념과 복지모형의 제시가 필요 • 휴머니즘에 근거한 나눔의 복지와 투자적 복지의 관계 정립 • 고령사회, 지식혁명시대, 지구촌시대에 대비한 창의적인 복지이념의 정립 필요

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즘'이란 지고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나눔과 분배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해나가는 노력이 기본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 지식혁명의 시대, 그리고 전지구촌이 갈수록 개방되고 국가간 이동에 제약이 사라지는 사회가 도래할 때에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혁명,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존의 복지와 건강, 교육정책의 대처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시장에서의 생산과 소비방식에도 정보화를 근간으로 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비전 2030에서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고

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소득수준을 비롯 한 피상적인 몇가지 지표들으로써 2030년의 한국이 기대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복지는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사회의 시나리오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복지이념과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OECD 국가나 미국, 일본 등의 모습을 복지비전의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의 능력과 국민 의식, 가치관 등을 토대로 우리만의 창의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복지지출의 확대를 추구해 왔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이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지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미래 발전의 패러다임

비전 2030이 바라보는 미래 발전의 패러다임은 혁신주도형, 시장주도의 균형성장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양적 투입위주와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모형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복지모형은 가족의 역할 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복지를 투자로 인식하고 복지가 인적자본 형성의 바탕이 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논리 구조를 세웠다.

새로운 발전모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논리적인 메카니즘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패러다임하에서는 정부주도의 성장이 성공적이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외환위기 이전은 성장이 고용도 창출하고, 분배에도 일정한 성과(trickle down effect)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압축성장과 불균형성장은 후유증을 낳았다. 기업운영의 정부 의존이 지나쳐 경제체질이 허약해지고 국제경쟁력면에서 취약하였다. 특히 정부관리에 익숙해져 있던 금융 시스템은 외부의 충격에 일거에 무너짐으로써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노동, 금융, 정부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 목표치를 하회하였고, 그나마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산업, 고용, 분배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생산인구의 감소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부상과 인도, 브라질 등 새로운 경제대국의 등장은 한국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요인들에 대처하여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에 정부와 시장, 국민이 빠르게 적응하여야 한다. 복지투자가 성장에 기여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이다. 성장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메카니즘을 회복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점이 두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가 투자로써 성장에 기여하는 계량분석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의 복지투자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도 성장에도 기여하는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3) 성장전략

비전 2030의 성장전략은 시장과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반성장전략의 기초를 제안하고 있다. 소위 '양날개론'에 의해 한쪽 날개는 자유시장경제의 동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다른 쪽 날개는 국가복지의 책임성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과 안정을 유지하여야 잘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속에서 생존하여야 하고 BRICs와 같은 신흥 경제대국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에 세계시장을 상대로 발

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을 통한 개방화와 나아가 스스로 능동적인 세계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즉 FTA 등 개방정책이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숙명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복지를 강화하면서도 복지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인적자본투자 혹은 사회자본투자로 인식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두 날개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쪽 날개가 다른 날개에 힘이 되고 조화를 이루으로써 힘차게 날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비전 2030은 복지에 대한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투자로서 개념을 정립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지제도에 대한 혁신을 통하여 제도와 관리 시스템의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복지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표 3. 비전 2030의 미래발전의 패러다임과 과제

비전 2030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적 투입위주·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모형 → 혁신주도형·시장주도의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 가족공동체 의존, 구조적 복지 → 정부 역할 제고, 미래투자로서의 복지 강조 물적자본투자 → 인적·사회적 자본투자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고용없는 성장, 분배 양극화 현상의 진단 필요 시장주도의 균형성장모형의 구체적 모습, 전략과 메카니즘의 개발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투자의 계량분석모형의 개발

그림 1. 비전 2030이 진단하는 국가발전모형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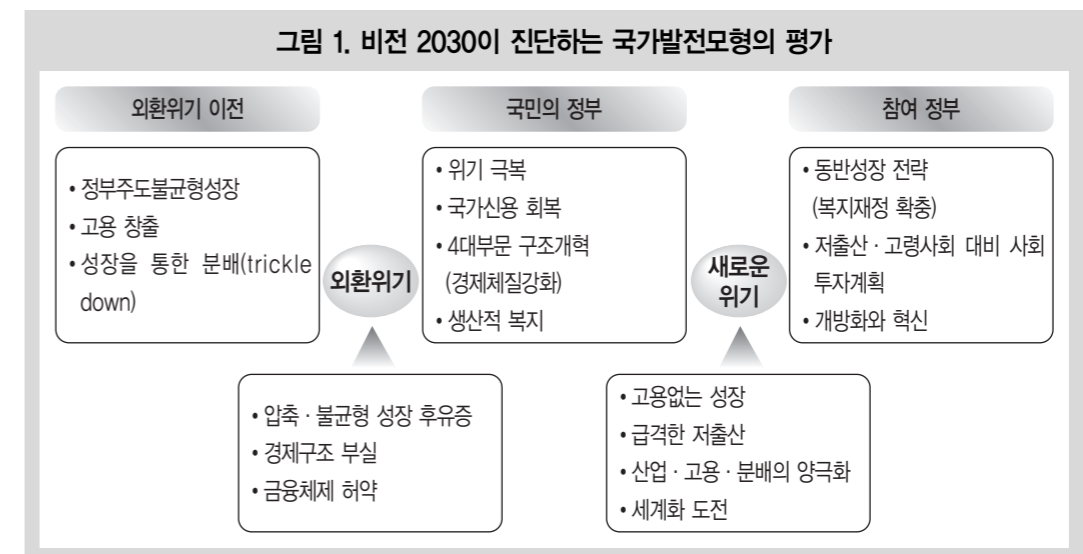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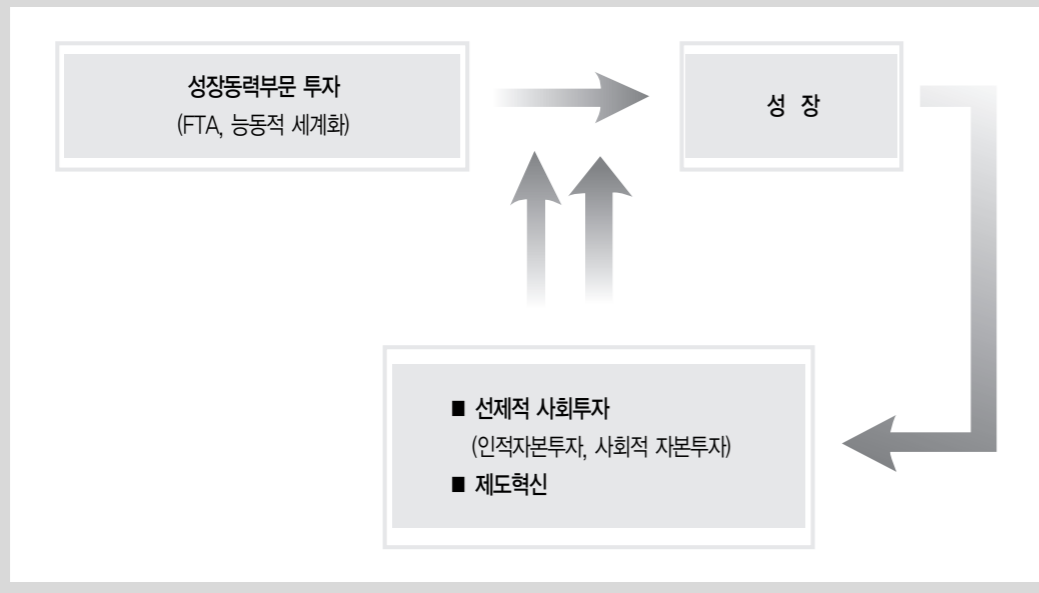


표 4. 비전 2030의 성장전략과 과제

비전 2030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 복지의 양면 전략 • 성장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정책 강조: FTA, 능동적 세계화 • 동시에 국가복지 강조: 복지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 + 제도혁신을 통한 성장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등 개방정책이 복지(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선제적 투자로서의 복지에 대한 검증 • 제도 혁신으로 인한 낭비 감축의 계량화

그림 2. 비전 2030의 성장모형



이러한 관점들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복지 고유의 속성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긴급한 복지지출임에도 투자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복지지출은 우선순위에 밀릴 우려가 있다. 즉 복지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FTA 등 개방정책이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개방화가 분배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예측은 거의 없다. 복지를 선제적 투자로 인식하고 강조한다면 복지투자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계량적인 모델이 구축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림 3]과 같이 복지의 선제적 투자 혹은 복지(분배)가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의 메커니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때

에 국민소득수준이나 성장률은 비전 2030에서 외생적으로 추정된 것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한편 현재의 복지제도들이 효율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없이 발전되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혁신은 필요하고, 제도 혁신의 방법에 따라 얼마나 낭비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복지재정의 목표와 자원조달

비전 2030이 목표로 하는 복지재정의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지향하며, 2030년에 GDP 대비 21%를 제시하였다. 이 수준은 2001년 기준으로 한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이다. 그리고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21% 수준을 상회할 것이지만, 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낭비를 줄임으로써 복지재정의 수준은 OECD 평균치이지만 복지혜택의 수준은 평균치 이상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재원의 조달방안으로써 2010년까지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복지수준과 국민부담의 수준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였다.

2030년의 복지재정의 목표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초고령화된 사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30년의 고령화율은 약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 현재 OECD 국가들의 고령화율이 평균 15%임을 감안해 볼 때 2030년경 우리나라는 세계 어

그림 3. 선제적 복지투자 및 동반성장의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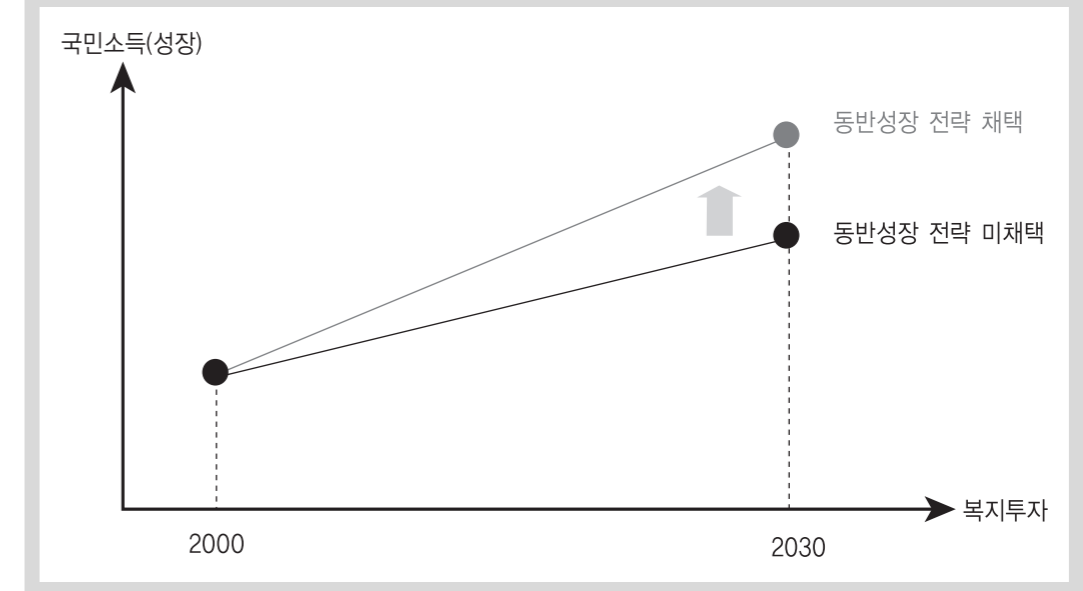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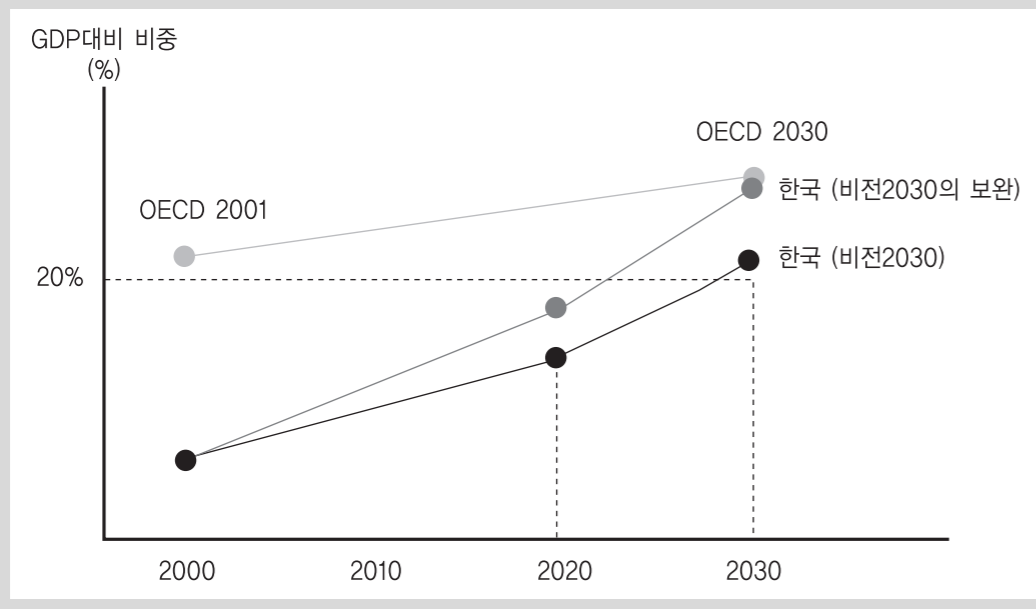


표 5. 비전 2030의 복지재정운영과 과제

비전 2030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재정규모(GDP 대비)의 목표: 2030년 21%(OECD 2001년 평균수준) •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로 미래재정 절감 • 재원: 2010년까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2011년 이후 국민부담 증액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의 고령사회·정보화사회 등을 고려한 적정 재정 규모 재산정 • 제도혁신의 구체적 설계, 혁신의 재정절감효과와 논리 보강이 필요 • 2007~2011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재검토

그림 4. 비전 2030의 복지재정 목표와 전망



는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도 2001년의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고 2030년에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의 예측대로 라면 선진국들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현재보다 복지재

정이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동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재정의 목표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제도의 혁신은 중요하며 향후 제도혁신의 구체적인 설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도 혁신에 따라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재정이 절감되면서도 복지혜택은 향상되는지, 그렇게

되는 논리적인 메카니즘에 대해서도 계량적인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제적 투자가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기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효율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연금수준을 삭감하는 제도개선이며 효율화에 의한(즉 낭비를 줄이는) 재정절감은 아닐 것이다.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2010년까지 증세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의 증액,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시행 여부, 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국고지원의 증가 등 국민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2007~2011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비전 2030이 5개년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넘어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기재정운영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 즉 재정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비전의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1년 이후의 재원 조달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증세 혹은 국채의 재정적인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재원조달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복지비전의 탐색: 사회투자국가

비전 2030이 제시하는 복지비전은 복지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복지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성장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Giddens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사회투자국가는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구좌파)와 신자유주의(신우파)를 뛰어넘는 제3의 복지국가모형으로써 제안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국가가 하향식으로 복지자원을 배분하는 비민주적이고 사후적으로 재분배하는 복지시스템의 틀을 혁신하는 데에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대신에 적극적 복지사회, 사회통합적인 복지사회의 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보다는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경제적인 혜택 뿐 아니라 심리적인 혜택(예,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복지체제를 의미한다.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한국형 복지국가'로서의 사회투자국가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투자국가의 원리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부(國富)를 창출함과 아울러 사회통합(inclusive society)을 이룩하는 것이다. 인적자본은 주로

교육과 건강이 중심이 된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등 신기술의 혁명이 지속되고 있고, 지식혁명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생애에 걸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중요시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국가의 건강성과 직결되고, 건강은 교육과 더불어 인적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인 안전과 신뢰, 투명성 등과 같은 것으로서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다. 경제적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부의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병행되어야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선진사회에 이를 수 있다.

사회투자가 국부 창출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전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에 대한 보편적인 투자는 국민들에게 교육과 건강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부 창출에 기여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수준의 향상은 고용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실업을 낮춤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국민들의 지적능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안정되고 신뢰받는 사회는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킨다. 안

전한 사회의 토대위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기업가정신을 꽃피움으로써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에 대한 신뢰는 사회공동체에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려는 토양을 제공하며, 이는 곧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와 대비한 사회투자국가는 적극적 복지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적극적 복지란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보호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사회적 위험의 긍정적 측면과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적극적 복지사회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5대 위험에 대한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대체시킨다. 즉, 궁핍(want)의 위험에 대처해서 자립에 대한 지원과 선택을 존중하도록 한다. 질병(disease)의 위험에 대처해서 건강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무지(ignorance)의 위험에 대처해서 보육·교육·훈련에 대한 평생투자를 통하여 교육수준을 제고한다. 불결(squalor)로부터는 안전과 투명성,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태(idleness)로부터 자존심과 기업가정신을 양양함으로써 진취성(initiative)을 제고한다. 